

# EU Brief

| EU 동향 |

- 유럽과 아시아,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며  
A new era of cooperation between Europe and Asia
- 2010년 대EU 교역 평가  
Korea's trade with the EU in 2010
- 유럽의회의 역할 증대와 한-EU 통상관계  
A strengthened role for the European Parliament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EU trade relations
- 유럽 재정위기 소방수로 나선 중국  
China: Putting out fire in fiscally constrained EU member states
- EU 기후변화 규제 강화와 산업계의 대응  
EU industries' responses to strengthened environmental policies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http://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 EU Focus

유럽과 아시아,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며 ..... 002  
A new era of cooperation between Europe and Asia



## EU Economy

2010년 대EU 교역 평가 ..... 004  
Korea's trade with the EU in 2010



## EU Politics

유럽의회의 역할 증대와 한-EU 통상관계 ..... 009  
A strengthened role for the European Parliament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EU trade relations



## Trade &amp; Investment

유럽 재정위기 소방수로 나선 중국 ..... 013  
China: Putting out fire in fiscally constrained EU member states



## Industry Trends

EU 기후변화 규제 강화와 산업계의 대응 ..... 018  
EU industries' responses to strengthened environmental policies



## EU Law

유럽안정화기구 설립을 위한 리스본조약 개정 절차 ..... 024  
Amending the Lisbon Treaty to enable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 Social Issues

기억문화를 통한 유럽의 정체성 찾기 ..... 027  
Searching for Europe's identity through a common memory culture



## Report Review

유럽 정부부채의 위험성과 해결 방안 ..... 032  
EU's sovereign debt crisis and lessons from the Past.



## EU Centre news

2011년도 다양한 대외 행사 준비 ..... 034  
Yonsei-SERI EU Centre's outreach activities in 2011

EU 설문조사 실시 ..... 036  
Survey on EU

EU Brief는 EU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Yonsei-SERI EU Centre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입니다.

The EU Brief is a newsletter published by the Yonsei-SERI EU Centre and fund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본지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지하며, 본지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위원: 이종규 | 감수위원: 김득갑 | 편집담당: 정민경 | EU Brief에 게재된 내용에 관한 문의나 개선사항은 편집 담당(02-3780-83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유럽과 아시아,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며

## A new era of cooperation between Europe and Asia

지난 1월 30일에 막을 내린 제41회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는 유럽의 재정위기와 더불어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국 경제가 주요 이슈로 논의되었다. ‘새로운 현실의 공동규범’이라는 주제를 놓고 30여 개국 정상과 1,400여 명의 CEO가 참가해 닷새 동안 열띤 토론을 벌인 이번 포럼에서 세계경제의 주요 이슈로 재정위기에 처한 유럽과 신흥국,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가 주목을 끌었다.

2010년 10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해서는 유럽과 신흥경제권을 대표하는 아시아의 상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재정위기의 그림자를 채 걷어내지 못하고 있는 유럽으로서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가 소망수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는 유럽을 세계 최대 수출시장임과 동시에 아시아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노하우를 전수해줄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유럽과 아시아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7월 1일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EU FTA는 유럽과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시대를 여는 시발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한-EU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이다. EU는 이를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 프로젝트의 성공작이자 EU 경제의 새로운 시험 무대로 평가하고 있다. EU가 2006년에 내놓은 ‘글로벌 유럽’ 프로젝트란 EU가 역내 통합의 경험을 살려 이를 전 세계의 통합과 번영을 위해 활용하겠다는 대외경제정책을 말한다. 여기에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무대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유럽의 의지가 담겨 있으며, 특히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각

오가 내포되어 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 역시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아시아로서는 대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과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유럽과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의 재정위기는 아시아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이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대거 매입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뒤질세라 일본도 유로존 국채 매입에 나선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단시일 내에 재정위기를 치유하기 어려운 유럽으로서는 아시아 자본의 지속적인 수혈과 아시아 시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EU FTA 협정 동의안의 발의자(Rapporteur)인 로버트 스티디(영국) 의원은 “한-EU FTA는 양측이 ‘원원’ 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이자 유럽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협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EU FTA를 필두로 앞으로 유럽과 아시아 국가 간에 자유무역협정이 늘어날 경우 양 대륙 간 긴밀한 협력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무역과 직접투자 등 다방면에 걸쳐 나타날 것이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시대 변화에 사람의 의식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유럽과 아시아가 상대방의 가치(value)를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때에만 ‘원원’의 협력시대가 가능하다. 새로운 협력시대를 위해서는 한-EU FTA로 인해 한국산 자동차가 유럽 자동차 산업의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한다든지, 중국의 대규모 남유럽 투자가 ‘중국자본의 유럽 침공’이라는 시각은 극복되어야 한다. ★

Two major issues, which were discussed at this year's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also known as the Davos Forum) were the sovereign debt crisis in the eurozone and the rise of emerging economies. Heads of 30 countries and more than 1,400 CEOs participated the forum under the title “Shared Norms for the New Reality” and it ran for five days until January, 30. Various forums focused on the future of the eurozone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emerging economies in Asia.

As it was agreed at the Asia-Europe Meeting (ASEM) in October, 2010, it is important for Asia, which represents a bulk of emerging economies, and Europe to strengthen their relationship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of world economy. Reflecting this idea, for those European countries mired in the sovereign debt crisis, China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reviving their economies as an investor. On the other hand, Europe is Asia's major trading partner and Asia recognises that it has much to learn from Europe's know-how and its development history. As a result, the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Europe and Asia is expected to strengthen in the future.

The Korea-EU FTA, which is expected to come into force on July, 1, has a significant historical meaning as a starting point of a new era of cooperation between Europe and Asia. The Korea-EU FTA is European Union's first free trade agreement with a country in Asia and the EU sees it as a successful case of its “Global Europe” strategy. The “Global Europe” strategy was launched in 2006 and the purpose is to lead the global economic integration and development by applying policies and experiences from its own integration process on the world stage. This reflects

EU's efforts to compete with the US in the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scene and to strengthen its relationship with fast growing countries in Asia.

Asian countries also recognise the needs to strengthen their relationship with Europe. The sovereign debt crisis in Europe provides a new opportunity for Asian countries to strengthen their relationship. For example, China has recently promised that it would purchase the government bonds of southern European countries and it has prompted Japan to follow suit. European countries in trouble are in a desperate need of capital and also of maintaining its access to the world's fastest growing market in Asia.

Robert Sturdy MEP, the European Parliament's rapporteur on the Korea-EU FTA has declared that the deal is “clearly a win-win situation” for the EU and Korea and it provides great opportunities to European firms. If the number of free trade agreements between the EU and countries in Asia rises, after a successful adoption of the Korea-EU FTA, there will be a new era of cooperation between two continents. With the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such as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wo continents will become important strategic partners in the future. The biggest obstacle for the realisation is people's inability to change their minds quickly along with the changing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s. Only when two continents accept each other's values and open their arms, they will truly be able enter the new era of “win-win” cooperation. As we prepare this, the views such as that the Korean cars (or the European pork) will harm Europe's car industry (or Korea's pork industry) or China's massive capital injection threatens Europe's sovereignty must be overcome. ★



# 2010년 대EU 교역 평가

## Korea's trade with the EU in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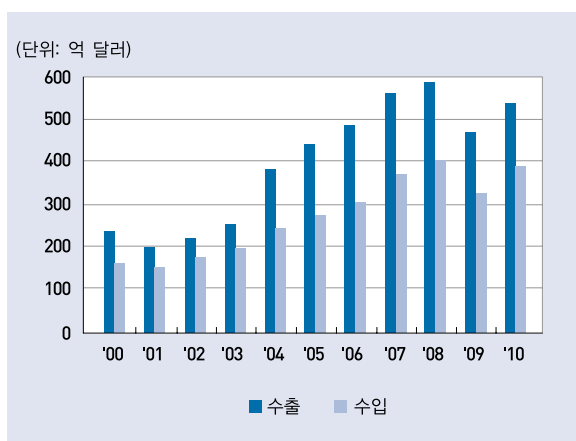
Korea's exports to the EU increased by 17% in 2010 to 92.2 billion dollars, but it failed to recover to the level achieved before the crisis in 2008, which was 98.4 billion dollars. Even with the exports close to that in 2007, the trade surplus was smaller by 4.4 billion dollars. In 2010, the main exports from Korea to the EU were ships, LCD, cars, parts and accessories of motor vehicles, mobile phone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petroleum oils, and televisions, and main imports from the EU were machines used for the manufacture of semiconductors, cars, medicament mixtures, parts and accessories of motor vehicles, chemical industry product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and air/vacuum pumps. The biggest risk facing the EU, which is Korea's major export market, is the continuation of the sovereign debt crisis in southern European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Korea-EU FTA which is expected to come into force on July, 1, 2011 would contribute to expanding the trade between Korea and the EU.

### 한국의 2010년 대EU 교역<sup>1</sup>

한국의 2010년 대EU 교역은 전년보다 17% 증가한 922억 3,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8년의 983억 6,000만 달러에는 미치지 못해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하였다. 수출은 535억 1,000만 달러, 수입은 38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해 각각 전년 대비 14.8%와 20.1% 증가를 보였다. 수출은 지난 2008년의 583억 7,000만 달러는 물론 2007년의 559억 8,0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 데 반해 수입은 오히려 2007년의 368억 2,000만 달러를 초과하였고, 최고 수준이었던 2008년의 399억 8,000만 달러에 근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수출증가율보다 수입증가율이 높기 때문인데,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의 차이는 2007년 -7%p, 2008년 -4.3%p, 2009년 -0.8%p로 점차 줄어들었으나, 2010년에는 -5.3%p로 다시 벌어졌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2007년 이후 계속 감소해왔다. 무역수지는 2007년 191억 6,000만 달러로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나, 이듬해인 2008년에는 183억 9,000만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다. 2009년에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였고, 무역수

### ★ 대EU 수출입 현황



자료: 한국무역협회

지 역시 143억 8,000만 달러에 그쳤다. 주목할 점은 2010년의 교역 규모가 2007년 규모에 근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2007년보다 43억 7,000만 달러 적고 2009년보다 2.8% 증가한 데 그쳤다는 것이다.

수출입의 전년도 월 대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수출은 2010년 전반에는 10% 전후의 증가율을 보였고, 6월과 7월에는 42%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8월에는 7.2%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11월에는 전년보다도 수출이 줄어 -2.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 하반기 이후 심화된 남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은 2010년 2월과 3월에 40% 전후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9월을 제외하고는 13.7~25.5%의 비교적 고른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주요 수출 품목<sup>2</sup>은 선박, 평판디스플레이, 승용차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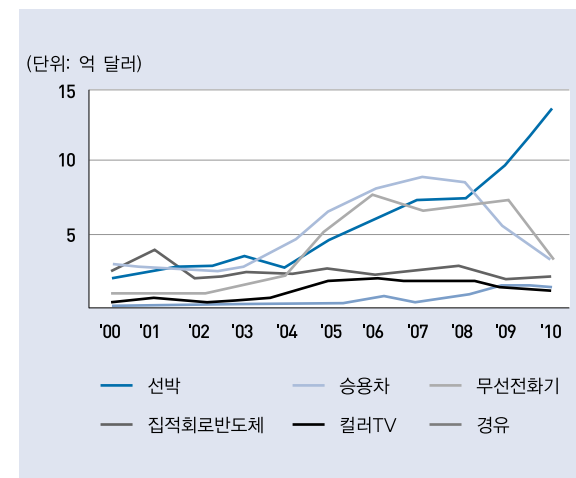
2010년에 한국에서 EU로 10억 달러 이상 수출된 품목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선박, 평판디스플레이, 승용차, 자동차부품, 무선전화기, 반도체, 경유, 컬러텔레비전 순이다.

선박은 135억 7,0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되어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된 평판디스플레이(54억 1,000만 달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선박은 2000년에는 20억 달러를 조금 상회하여 당시 승용차와 반도체에 이어 3위였으나, 2007년부터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되는 품목으로 올라섰고, 2009년부터는 100억 달러 이상 수출되고 있다. 평판디스플레이는 2005년 이후부터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 2010년에는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된 품목이 되었다.

승용차는 2000년에 EU로 가장 많이 수출된 품목으로, 2003년까지는 반도체나 선박보다 수출이 적기도 하였으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가장 많이 수출되었다. 그러나 EU 현지의 공장 가동이 본격화된 2009년부터 한국으로부터의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다. 2008년에 86억 달러 이상 수출되던 승용차는 2009년에 52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다시 33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승용차 판매 감소 때문이 아니라 현지 생산 증대에 따른 것으로, 이는 자동차부품의 수출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2000년에 2억 4,0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현지 생산이 늘어나면서 2008년에 22억 2,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9년 24억 달러에 이어 2010년에는 31억 달러를 넘어섰다.

<sup>2</sup> 품목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MTI 4단위를 기준으로 함.

### ★ 대EU 수출 품목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승용차와 함께 최근 수출이 크게 줄어든 품목은 무선전화기다. 2006년에 77억 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하였던 무선전화기는 2009년에도 74억 9,0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되었으나, 2010년에는 29억 9,000만 달러로 큰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 확대에 따른 제3국 수출 증가, 급격히 확대된 스마트폰 시장과 해당 시장으로의 낮은 진입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경유 역시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품목으로, 2009년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14억 3,0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되었다.

컬러텔레비전은 2010년에 12억 2,0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되어 여전히 많이 수출되는 품목이기는 하나, 2006년의 19억 달러 수출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대EU 20대 수출 품목 가운데 컬러텔레비전처럼 수출이 감소세인 품목으로는 모니터, 보조기억장치, 컴퓨터부품, 건설중장비, 냉장고, 편직제의류 등이 있다. 이는 IT 시장의 변화로 전체 산업에서 개인용 컴퓨터(PC) 비중의 감소, 가전제품의 현지 또는 제3국에서의 생산 증가와 국내 생산 감소, 섬유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sup>1</sup> 모든 무역통계는 2010년 2월 현재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무역통계 DB에서 추출함.



###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제조장비, 승용차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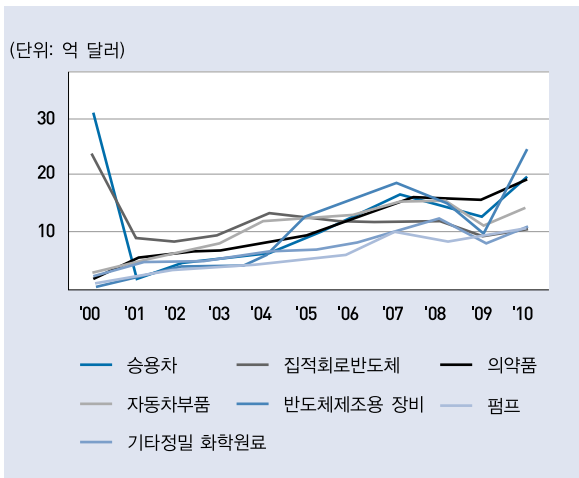
2010년 EU로부터 10억 달러 이상 수입한 품목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반도체제조장비, 승용차, 의약품,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반도체, 펌프 순이다.

반도체제조장비는 자체 경기 요인에 의해 수입 규모가 결정되기보다는 장비를 통해 생산되는 최종재인 반도체의 수요와 신기술이 적용된 생산설비 증설에 좌우되는 특성이 있다. 2005년에 처음으로 수입이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18억 달러 이상이 수입되었다. 2009년에는 9억 6,000만 달러어치가 수입되는 데 그쳐 잠시 주춤하였으나, 2010년에 24억 5,000만 달러로 다시 크게 증가하였다. 승용차는 2000년에 가장 많이 수입된 품목이었으나,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1억 6,000만~5억 9,000만 달러어치가 수입되는 데 그쳤다. 그러나 2005년의 8억 9,000만 달러를 시작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계속 증가세를 보였고, 2010년에는 19억 6,000만 달러어치가 수입되었다.

의약품 역시 꾸준히 수입이 증가해온 품목으로 2000년 이후 2009년을 제외하면 계속 전년도보다 수입이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9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자동차부품의 수입은 승용차의 수입 증가에 맞춰 증가하였다. 2000년에는 2억 4,000만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11억 달러를 돌파해 2010년에는 14억 3,000만 달러어치가 수입되었다. EU는 고부가 정밀화학원료의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품목 역시 꾸준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8억 달러도 수입되지 못해 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0년에는 10억 8,000만 달러가 수입되어 다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처럼 수출에서 품목에 따라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거나 글로벌 생산 확대에 따른 한국으로부터의 직수출 감소의 영향을 받는 등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것과 달리, 수입에서는 선박과 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 ★ 대EU 7대 수입 품목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EU 현지 생산설비 투자에 따라 주요 수출국은 변화

2010년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헝가리, 벨기에, 스페인 순이다. 대독일 수출은 1990년대 중반 대EU 수출의 37%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20% 초반대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다른 어느 EU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도 21.3%를 기록하였다. 대영국 수출은 2000년에 23%를 차지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0년에는 11%를 나타냈다. 대네덜란드 수출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10% 전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0.5%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유럽대륙으로 진출하는 해운 물류기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관 기준으로 집계되는 무역통계에서 수출이 많이 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제치고 대EU 수출에서 슬로바키아와 폴란드, 헝가리가 상위권에 들어섰다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슬로바키아 수출은 2006년까지도 2.8%에 그쳤으나 2007년 5%를 넘어섰고, 2010년

에는 8.8%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대폴란드 수출 역시 1990년대 후반 4%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05년까지 1~2%대에 그쳤다. 그러나 2009년에 10%를 차지하였고, 2010년에도 8.7%를 나타냈다. 이와 반대로 이탈리아와 프랑스로의 수출은 감소세가 뚜렷해 2010년 수출은 각각 7.1%와 5.9%에 그쳤다. 헝가리로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4.7%였으나, 벨기에와 스페인에 대한 수출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각각 4%와 3.7%에 그쳤다.

이처럼 대EU 수출에서 국가별로 점유율이 변화한 원인으로는 우선 EU 확대에 따른 회원국 증가를 들 수 있고, 나아가 그동안 EU 현지 생산설비 투자가 증가해왔고, 이러한 투자가 비교적 최근에 EU에 가입한 슬로바키아와 폴란드, 헝가리 같은 동유럽권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는 가전업체가, 슬로바키아와 체코에는 자동차업체가 대규모 투자를 하였고, 이에 필요한 대규모 공장설비 수출에 이어 현재는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이 많이 수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수출증가율이 해당국 전체의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품목은 소비재인 반면, 앞서 언급한 동유럽권 국가에 대한 수출은 자본재와 부품, 소재 등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2010년 GDP 성장률이 각각 3.3%와 3.9%로,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1%대 성장률을 보이는 것과 달리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 지역에 대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설명해준다.

### 대EU 수입은 독일과 프랑스에 집중

2010년 대EU 수입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벨기에 순이다. 특히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입을 하고 있는 EU 국가인 독일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7

### ★ 대EU 7대 교역국 및 수출입 비중

(단위: %)

수출		순위	수입	
국가	점유율		국가	점유율
독일	21.2	1	독일	38.2
영국	11.0	2	프랑스	11.4
네덜란드	10.5	3	네덜란드	11.2
슬로바키아	8.8	4	이탈리아	9.4
폴란드	8.7	5	영국	8.7
이탈리아	7.1	6	스웨덴	3.8
프랑스	5.9	7	벨기에	3.1

자료: 한국무역협회

년을 제외하면 1990년대 이후 한 해도 3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2010년에도 수입 점유율은 38.2%를 기록했다. 프랑스로부터의 수입 역시 독일보다 절대 규모는 작지만 1990년대 이후 꾸준히 1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1.4%를 나타냈다. 네덜란드로부터의 수입은 1990년대에 10% 미만의 점유율을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 10%를 넘기기 시작해 2010년에는 11.2%를 보였다.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은 1990년대 이후 10% 전후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2010년에도 9.4%를 차지하였다.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990년대 후반에는 10% 후반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10년에는 8.7%까지 감소하였다.

품목별 수입에서 확인되듯이 대EU 수입은 소비재와 함께 고부가 부품소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아직 산업 발전 수준이 낮은 동유럽권에서의 수입은 점유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전기전자와 기계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서의 수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로부터는 정밀화학과 고급의류 등의 수입도 이루어지고 있다.

### 2011년 대EU 무역 전망

2011년 대EU 교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남유럽 재정

# 유럽의회의 역할 증대와 한-EU 통상관계

## A strengthened role for the European Parliament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EU trade relations

With the Lisbon Treaty coming into force in 2009, the European Parliament has become a key institution as its legislative power has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The number of areas on whic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applies to has more than doubled. It was previously called the co-decision procedures and what used to be the exception in decision making has now become the norm for most policy areas.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in the area of common commercial policy regarding anti-dumping, safeguard, fair trade, general preferential duties and trade agreements has also been strengthened and this will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EU's trading partners. As the Korea-EU FTA is waiting to be ratified by respective governments, we can see that the European Parliament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regarding trade issues. The European Parliament's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has recently passed the bilateral trade safeguard act and has given its backing to the FTA. The deals will now go to the European Parliament plenary session for the final vote in mid-February.

### 최근 영향력이 급부상한 유럽의회

한-EU FTA는 이제 한국국회와 유럽의회의 비준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유럽의회는 2월 또는 3월 중, 한국국회도 3월 정도면 FTA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2011년 1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는 한-EU FTA 양자 세이프가드 이행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유럽의회가 한-EU FTA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2009년 12월 리스본조약의 발효로 유럽의회는 앞으로 통상협상의 진행 과정에서 협상의 진척 상황에 대해 집행위원회의 정기적인 보고를 받게 되었다. 통상협상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안에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유럽의회가 EU의 대외통상정책 수행 과정에서 협상과 비준, 이행 모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뜻한다.

과거 유럽의회는 '말잔치나 하는 곳(talk shop)'에 불과하였다.<sup>1</sup> 이는 1979년에 직선제가 도입되어 EU의 주요 기구 중 유일하게 시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기관이라는 위상을 획득한 후에도 크게 달라지

지 않았다. 구속력 없는 선언문이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EU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최근 들어 EU의 통상정책 수행 과정에서 유럽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활약은 과거의 양상과는 사뭇 다르다. 유럽의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 리스본조약의 발효에 따라 유럽의회 권한 확대

EU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변방에 머물러 있던 유럽의회의 발언권이 제도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단일유럽의정서(SEA: Single European Act)가 채택되면서부터다. 이후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일명 마스트리흐트조약)과 암스테르담조약, 니스조약을 거치면서 유럽의회의 권한은 꾸준히 확대되었고, 마침내 2009년 리스본조약의 발효와 함께 명실공히 EU의 핵심 기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유럽의회의 위상 제고와 권한 강화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힘입은 바가 크다. 첫째로 EU 회원국 정부들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민주성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을 극복하기 위해 유럽의회 구성에 직선제를 도입하는 데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EU가 민주

<sup>1</sup> 최진우 (1999), "유럽의회의 발전과 유럽통합: 유럽연합의 민주성과 정통성," 『국제정치논총』, 39(2), 131-147.

위기의 안정화와 그 시기일 것이다. 2009년 말 그리스에서 시작된 재정위기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같은 남유럽 국가로 확산되었고, 2010년 중반부터는 유로화체제의 존속 가능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남유럽 국가가 국가부도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도달하지 않겠지만, 여전히 국가 간 의견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유로화의 취약성과 EU 회원국 간 빈부격차의 확대는 EU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한국의 대EU 수출을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유로화 약세가 가속화된다면 유럽 현지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sup>3</sup>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수주부터 인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선박 수출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 것이고,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와 컬러텔레비전, 가전 등에 필요한 부품소재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1%대 성장률에 머물며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가 또는 첨단 제품의 수출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sup>3</sup> 삼성경제연구소 (2010. 6.),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경제의 항방"

<sup>4</sup> 정부부처 합동 (2009. 10.),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대EU 교역에서 가장 큰 기회요인은 7월 1일에 잠정적용(잠정발효)될 예정인 한-EU FTA다. 특히 EU는 한-EU FTA를 통해 수입액 기준으로 76.6%, 품목수 기준으로는 94.0%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철폐하게 된다.<sup>4</sup> 한국 기업들이 한-EU FTA에 대해 거는 기대가 높는데, 대EU 교역업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수출기업의 71.7%가 FTA를 통한 수출 증가를 기대한다고 답하였다.<sup>5</sup>

그러나 한국 역시 FTA를 통해 수입액 기준 66.7%, 품목수 기준 81.7%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철폐하는 만큼 EU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불가피하다. 특히 EU의 낮은 경제성장률전망과는 달리 한국 경제는 5%에 가까운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EU 수출보다는 수입 증가 경향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11년 한국 기업들은 경쟁국의 기업들이 얻지 못할 FTA 관세철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EU 내 신흥경제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sup>6</sup>

<sup>5</sup> 한국무역협회 (2010. 10.), 대EU 교역업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자료.

<sup>6</sup> 본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단체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적 정치 시스템이며,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치인들이 EU의 의사결정 과정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둘째로, 유럽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노력을 들 수 있다. 의원들은 EU의 제도적 변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전략적인 움직임을 선보여 유럽의회의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sup>2</sup> 특히 리스본조약은 유럽의회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조약(TEU: Treaty on the European Union)과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조약(TFEU: Treat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유럽연합조약의 ‘기관에 관한 규정(Provisions on Institutions)’은 “EU의 가치를 촉진하고 목표를 추구하고, EU와 EU 시민 및 회원국의 이익에 봉사하며, EU의 정책 및 행동의 일관성과 효율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모두 7개의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유럽의회다.<sup>3</sup>

유럽연합조약은 유럽의회의 권한에 대해 제14조 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해놓고 있다.

*유럽의회는 이사회와 함께 입법과 예산 기능을 수행한다. 유럽의회는 조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치적 감독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유럽의회의 주요 기능에는 입법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는 리스본조약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다. 또한 유럽의회는 리스본조약하에서도 여전히 일반 의회와는 달리 입법제안권

을 갖지 못해 의제설정 권한(agenda-setting power)을 결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유럽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확대된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EU의 의사결정 과정 변화와 유럽의회의 강화

유럽연합의 의사결정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자문절차(consultation procedure), 보통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on procedure), 동의절차(consent procedure)가 그것인데, 이 중에서도 두 번째의 보통입법절차와 세 번째의 동의절차가 중요하다.

현재 유럽의회는 마스트리히트조약 체제하에서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로 불리던 보통입법절차 단계에서 입법안을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각국의 각료로 구성되는 이사회와 함께 의사결정의 실질적인 공동파트너가 되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의사결정절차가 적용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유럽의회의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 여지가 작았다. 그러나 리스본조약은 보통입법절차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유럽의회가 관장할 수 있는 영역을 크게 확장하였다. 리스본조약에서는 보통입법절차의 적용 분야가 과거 43개에서 농업, 수산업, 내무사범을 포함하여 약 두 배 가까이로 대폭 확대되어, 유럽의회가 집행위원회의 입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반덤핑, 세이프가드, 공정거래, 일반특혜관세, 무역협정 등 공동통상정책에서의 역할이 강화된 점이 눈에 띈다. 예산 분야에서도 과거 유럽의회는 공동농업정책의 보장 부문이나 지역정책의 수행을 위한 ‘의무지출’ 부문에 대해서는 예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나, 리스본조약에서 의무지출과 비의무지출의 구분이 없어지면서 예산 부문에서 이사회와 동등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sup>4</sup> 이에 따라 유럽의회의 권한이 막강해진 것이다.<sup>5</sup>

동의절차는 매우 단순한데, 여기에서는 유럽의회의 권한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동의절차하에서는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입법안에 대해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모두 동의를 하면 통과가 된다. 이 과정에서 유럽의회는 입법안을 수용 또는 거부만 할 수 있고, 수정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유럽의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 현실적으로 입법안을 발의한 집행위원회가 이를 무시하기란 쉽지 않다. 즉 집행위원회의 입법안에 유럽의회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이 크게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동의절차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의사결정제도는 아니다. 동의절차가 적용되는 예는 회원국이 EU의 근본원칙을 위배했을 때의 대응 조치와 일부 국제협정의 비준, EU의 확대, 다년간의 재정계획, 시민권 확대 등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처럼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유럽의회와 다른 주요 기구, 즉 이사회나 집행위원회와의 권한 격차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의회의 강화된 위상이 통상정책 분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 유럽의회의 통상정책 권한 신장

리스본조약 이전에는 통상협정의 협상과 체결, 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 마련은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의 소관이었으며, 유럽의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sup>6</sup> 그러나 리스본조약에서는 유럽의회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다. 통상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측면

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집행위원회는 통상협정의 협상과 체결 과정에서 이사회 산하의 국제통상위원회(207조 위원회, 구 133조 위원회)<sup>7</sup>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에도 정기적으로 협상 진척 상황에 대해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로써 유럽의회가 통상협상 과정에 현저히 증대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218조 6항에 근거하여 통상협정이 최종 비준되기 위해서는 동의절차에 의해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 따라서 유럽의회는 실질적으로 협상 결과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게 되었다. 셋째, 보통입법절차에 의거해 유럽의회가 공동통상정책 수행을 위한 제도적 틀을 수립하는 입법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는 통상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고, 나아가 통상협정에 대한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협상 결과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조치 수립에 관여할 수 있게 되어 EU의 대외통상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유럽의회의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는 유럽의회 내에 조직된 위원회가 있다.

유럽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담당한다. 유럽의회의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와 특별위원회(ad hoc committees)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문제나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설치된다. 2009년에 임기를 시작한 유럽의회는 총 20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유럽의회 의원들은 5년간의 임기 중 두 차례, 즉 초반과 중반에 상임위원회 소속을 배정받는다.

<sup>4</sup> 의무지출이란 “공동체가 설립 조약 또는 그에 의거해서 제정된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대내외 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산 당국이 예산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는 세출”을 의미한다. 의무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공동농업정책과 지역개발정책에 의거한 지출이다.

<sup>5</sup> 원래 다른 방식의 입법절차가 적용되다가 리스본조약에서 보통입법절차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변경된 정책분야의 목록은 Piris, J. C. (2010). *The Lisbon Treaty: A Legal and Political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365-368 참조.

<sup>6</sup> Niemann, A. (2006). *Explaining Decisions in the European Un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15.

<sup>7</sup> 리스본조약 발효 이전 EU의 제3국과의 통상교섭은 EC조약 133조에 의거해 진행되었다. EC조약 133조에 의하면 이사회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상교섭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집행위원회가 이사회가 설치한 특별위원회와의 협의하에 통상교섭을 진행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이사회가 설치하는 이 위원회를 일컬어 ‘133조 위원회’라고 했는데, 리스본조약의 발효와 함께 해당 조항의 번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207조 위원회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sup>2</sup> Piris, J. C. (2010). *The Lisbon Treaty: A Legal and Political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22.

<sup>3</sup> 유럽의회를 제외한 6개 기관은 유럽이사회, 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중앙은행, 회계감사원이다.



# 유럽 재정위기 소방수로 나선 중국

## China: Putting out fire in fiscally constrained EU member states

China is becoming an important strategic partner of the EU as it is helping out EU's fiscally constrained member states by investing in various parts of their economies. Previously, China's investment was concentrated in "Big 3" EU member states (i.e. Germany, France and the UK), but China is now looking at peripheral countries as alternative investment destinations. As the Chinese government eases its external investment rules and provides financial support for outward-oriented firms, China's private capital inflow into the EU is expected to rise. This will give fiscally troubled EU member countries some room to breathe. Chinese firms are planning to expand their investment not on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infrastructures (e.g. logistics, communications), but also in product planning and design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The Korean government and corporations must learn from China's investment strategy and should regard the sovereign debt crisis as an opportunity to expand their presence in the EU market.

### 중국, 대규모 자금을 앞세워 '유럽 구하기'에 나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영어 속담이 있다. 최근 대규모 자금을 앞세워 유럽 구하기에 나선 중국이 유럽의 새로운 동반자로 떠오르고 있다. 2010년 중반 이후 후진타오 국가주석(프랑스, 포르투갈), 원자바오 총리(그리스, 이탈리아), 리커창 부총리(스페인) 등 중국의 거물급 정치인들이 연이어 유럽을 방문해 돈 보따리를 풀자 유럽은 이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과거 중국 영토를 식민지로 거느렸던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신세가 역전되어 중국의 선처를 바라는 처지가 되었다.

EU는 중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이다.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으로서는 유럽 경제와 유로화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 유로화 약세는 유럽시장에서 중국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중국의 경제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중국이 소방수로서 위기에 처한 '유럽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책임 있는 장기 투자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국익을 우선하면서 철저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자원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지역 투자에 주력해온 반면, 유럽지역 투자에는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유럽에 재정위기가 발생한 2년 전부터 중국의 유럽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2009년 중국의 대(對)유럽 신규 투자 건수가 30%가량 증가하였다. 과거 중국은 유럽의 빅3(독일, 프랑스, 영국)와의 관계에만 집중했으나, 최근 들어 재정 위기로 고전하고 있는 주변국(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국제 매입과 함께 유럽시장 공략에 필요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 외환보유고 다변화를 위해 유럽의 국제 매입을 확대

2010년 12월 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조 8,470억 달러에 이른다. 2위인 일본의 외환보유액(1조 960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이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0년 한 해 동안 약 4,500억 달러, 2010년 4/4분기에만 분기별 사상 최대 규모인 1,993억 달러 증가하였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이미 적정 수준을 초과한 상태로, 중국정부는 불어나는 외환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국은 물가압력과 국제사회의 위안화 절상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해외에 투자해왔는데, 주로 미 재무부 증권에 투자했다. 2010년 12월 기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8,956억 달러로, 해외 각국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의 21%를 차지한다. 중국은 아직까지 미 재무부 증권 외에 급증하는 외환보유액을 흡수해줄 만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EU의 통상정책은 유럽의회의 상임위원회 중 2004년에 설립된 국제통상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의 소관이다.<sup>8</sup> 국제통상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입법안을 유럽의회로 송부하면 이를 받아서 독회를 거쳐 유럽의회 본회의에 보고서와 권고안을 상정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통상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입법안에 대한 유럽의회의 입장을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리스본조약으로 크게 신장된 유럽의회(그리고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의 통상정책 권한이 최초로 활용된 예가 바로 한국과 EU의 FTA 관련 정책결정 과정이다.

한국과 EU 사이에 체결된 FTA 최종안이 비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리스본조약에 따라 유럽의회의 동의(consent)가 필요한데, 현재 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EU는 한-EU FTA 협정의 실행을 위한 EU의 대내적 조치의 일환으로 세이프가드 규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에 명시된 공동통상정책의 실행을 위한 제도적 틀을 정하는 조치에 해당한다.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보통입법절차에 의거해 입법을 추진해 2011년 1월 마침내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2010년 6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제1차 독회에서 세이프가드 입법안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는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국제협정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보통입법절차가 적용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 대EU 통상정책 수행 시 유럽의회에 대한

#### 다각도의 준비 필요

이처럼 한-EU FTA 협상과 비준이 진행되고 있던 시점에 발효된 리스본조약은 유럽의회의 위상을 전

반적으로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통상정책 분야에서 비중을 증진시키고 있다. 그 결과 한국과 EU의 통상관계에서 유럽의회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의 대EU 통상정책 수행 과정에서 유럽의회를 항상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한국과 EU의 의회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럽의회 내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입장을 수시로 설명할 수 있는 유럽 의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류가 필요하다. 국제통상위원회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FTA가 리스본조약 체제하의 통상정책 분야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초의 실질적 정책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국제통상위원회의 관심이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지만 EU와의 통상정책 수행 과정에서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그리고 개별 회원국의 역할이 크게 감소했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집행위원회는 여전히 의제설정권한과 정책 이행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사회 또한 개별 회원국의 입장을 수렴해 의사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리스본조약으로 유럽의회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집행위원회가 추진하고 이사회가 동의하며 27개 회원국이 지지하는 입법안에 대해 유럽의회가 크게 다른 입장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의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필요성이 곧 집행위원회나 이사회 및 회원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대EU 통상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새로운 주요 행위자의 범위가 늘어났을 때 기존 역량을 분산시키기보다는 전반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최진우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sup>8</sup> Woolcock, S. (2010). Trade Policy. In Wallace, Helen and Pollack, Mark A. Pollack, and Young, Alasdair R. V (Eds.), *Policy-Making in the European Union*(p. 38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지금까지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4분의 1 정도만을 유로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정도로 경제규모에 비해 유럽의 비중이 미미했다. 현재 중국은 유로존 17개국 이 발행한 국채의 약 10%(7,000억 유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외환보유액 투자가 미국 일본 등에서 유럽, 아시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의 국채를 적극 매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외환보유액의 운용을 다양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중국은 미국 위안화 절상압력의 예봉을 피하는 한편, 수익률이 낮은 재무부 증권 대신 수익률이 높은 유럽 국채에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유럽 국채 매입 확대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저변에 깔려 있다.

#### 민간자본도 유럽투자 확대에 나설 전망

중국기업들도 유럽시장 확보를 위해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5.3%에 불과했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5년간 중국의 對EU 직접투자(ODI) 규모는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은 선진기술과 함께 EU 시장 진출에 필요한 브랜드와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09년 5월 중국정부는 1억 달러 이상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만 중앙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또한 2009년 7월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기업들의 해외사업 확장과 기업 인수를 돕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적극 사용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해외투자 규제완화 조치와 정부의 금융지원에 힘입어 민간자본의 유럽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유럽 투자 확대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한숨을 돌리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 그리스를 동유럽 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활용

2010년 10월 초 중국 총리로서는 24년 만에 그리스를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는 위기 극복을 위한 그리스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방문기간 동안 양국 정부와 업계는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13건의 경제·투자 관련 계약에 합의하였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중국이 그리스 국채 매입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으로, 재정위기 이후 국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에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또한 45억 달러 규모의 ‘그리스-중국 해운발전기금’을 신설해 그리스 선사들이 중국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할 수 있는 지원책도 발표하였다. 앞으로 중국의 그리스 선박 수주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그리스 선박 발주의 최대 수주국인 한국의 입지가 위협받게 될 전망이다.

중국은 발칸반도와 신흥 유럽시장 진출의 관문 역할을 하는 그리스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해 해상운송, 관광, 통신 등의 분야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중국의 국영 해상운송업체인 코스코(Cosco)는 34억 유로의 장기 임대계약을 통해 최대 항구도시인 피레아프스(Piraeus)에 있는 두 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는 중국 제품을 그리스를 통해 발칸반도 전역에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코스코는 그리스 국영 항만회사와 합작으로 1.5억~2억 유로를 투자해 물류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역능력은 현재 160만 TEU에서 370만 TEU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중국기업들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그리스 철도회사(OSE)의 민영화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의 화웨이(Huawei Tech)는 그리스 통신사 OTE에 통신장비를 공급하고, 차이나아르텍스(China Artex)는 익티노스 헬라스(Iktinos Hellas)와 대리석 교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BCEGI 그룹은 헤리오스 플라자(Helios Plaza)와 피레아프스에 대형 호텔 및 쇼핑몰을 건설할 계획이며, ZTE는 아테네대학교에 공자 강좌를 개설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중국기업들의 생산거점 마련을 위해 아일랜드에

##### 대규모 투자

2010년 6월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리창춘)이 이끄는 고위급 투자사절단이 아일랜드를 방문하였다. 사절단은 2004년 원자바오 총리 이후 지난 6년간 아일랜드를 방문한 중국의 최고위급 사절단이었다. 사절단의 주된 방문 목적은 중국기업 전용공단 건설 사업을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카우언(Brian Cowen) 아일랜드 총리는 투자사절단과의 회의에서 프로젝트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중국기업들은 아일랜드 중부지역의 애슬론(Athlone)에 5,000만 유로를 투자해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7월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를 “베이징-온-새넌(Beijing-on-Shannon)”이라고 부르고 있다. 2,000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투입되어 600에이커 부지에 수백 동의 공장건물과 학교, 철도역, 아파트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공단이 조성되면 8,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아일랜드가 제공하는 유럽 내 최저 법인세율(12.5%)과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돈이 필요한 아일랜드’와 ‘시장이 필요한 중국’ 모두에게 이익인 셈이다.

현재 아일랜드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은 115개사로, 10년 전(45개사)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중국기업들이 아일랜드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흑독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아일랜드는 중국기업들의 유력한 생산거점(gateway)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 국채 매입 등 스페인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아일랜드를 거쳐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유로존의 운명은 스페인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스페인은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무디스에 따

르면, 스페인 중앙정부는 2011년 한 해 동안에만 약 1,700억 유로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조달액(300억 유로)까지 합할 경우 총 2,000억 유로에 이른다. 2011년 유로지역 전체의 국채발행 물량은 무려 8,240억 유로로 추정되며, 1월에만 10%를 발행할 예정이다.

만약 스페인이 자금조달에 실패할 경우 그리스, 아일랜드와 유사한 구제금융을 EU와 IMF로부터 지원받을 수밖에 없다. 유로지역 4위인 스페인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 경우, 그 지원액은 그리스와 아일랜드를 합한 금액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은 스페인 국채의 약 1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투자국 중 하나다. 스페인으로서는 중국의 국채 매입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난 1월 4~6일에 100명 이상의 재계 지도자들과 함께 스페인을 방문한 리커창 중국 부총리는 국가수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국왕, 사파테로 총리, 살가도 재무장관, 히메네스 외무장관을 포함한 스페인 지도자들과 고위급 회담을 연이어 가졌다. 리커창 부총리는 스페인의 최대 일간지인 『엘 빠이스(El Pais)』와의 인터뷰에서 스페인의 경제개혁을 지지하며 스페인 국채(약 60억 유로로 추정)를 계속 사들일 것을 약속하였다.

이는 최대 수출시장인 EU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밖에도 양국은 은행, 통신, IT, 관광, 에너지 및 운송, 농업 등 총 16개 분야에서 57억 유로 규모의 협력 사업에 서명하였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중국의 국영 석유회사 시노펙(Sinopec)이 약 71억 달러에 스페인 석유회사 렉솔(Repsol)의 브라질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앞으로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중국 투자를 환영

유럽 정치권은 중국의 투자 확대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재정위기로 고전하고 있는 주변국들



★ 2010년 중국의 유럽 재정위국 투자 사례

국가명	국채매입(예상)	실문부분 투자
그리스	40억 유로	- 13개 분야(해상운송, 관광, 통신) - 그리스-중국 해운발전기금 신설 (45억 달러) - 아테네대학교 공자 강좌 개설
아일랜드	-	- 중국기업 전용 애슬론 공단 조성 (5,000만 유로 투자)
포르투갈	40~50억 유로	- 금융, 물류, 관광, 신재생에너지
스페인	60억 유로	- 16개 분야에서 57억 유로 규모 - 은행, 통신, IT, 관광, 에너지 및 물류, 농업 등 - 시노펙의 렐솔 브라질 사업 인수 (71억 달러) - 텔레포니카(Telefonica, S. A.)-차이나 유니콤(China Unicom)의 지분 상호보유를 통한 전략적 제휴
이탈리아	-	- 25억 달러 규모 - 제조업(자동차, 기계, 의류 등), 물류, 신재생에너지, 통신 등 - 상품기획, 디자인 분야에서 기업인수 및 제휴

자료: WSJ, Financial Times 등 외신 종합

은 중국의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와 포트폴리오 및 민간기업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유럽의 정부 관료들이 상하이 엑스포에 참석해 중국기업들을 상대로 국가 홍보에 열을 올린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의 유럽 투자는 정부의 입김이 강한 국유기업과 은행, 투자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중국의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나 호주, 일본처럼 EU 차원에서 외국인투자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10년 12월에 EU집행위원회의 산업담당 집행위원인 타야니(Antonio Tajani)는 중국의 전략적 자산 매입에 우려를 표하며, 외국기업의 유럽 기업 인수를 심사할 수 있는 감독기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는 중국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유럽 내 핵심기업을 대거 인수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EU집행위원회의 알무니아(Joaquin

Almunia)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양국 간에 상호주의 적용 등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으나, 중국의 유럽 국채 매입으로 유럽 경제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졌음을 지적하고, 그 대가로 EU 회원국들이 중국 투자에 대해 보다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정부와 기업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 확대에 나설 필요

유럽의 재정위기는 자금력이 풍부한 투자자들에게 절호의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은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주변국 투자를 통해 유럽 시장 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자국 기업이 추진하는 항만과 철도,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을 지원함으로써 유럽 내 물류 및 생산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할 전망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후유증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대규모 교통인프라(운하,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가 중국 자본에 의해 건설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일본과 더불어 유럽 시장에서 한국의 주된 경쟁 상대다. 중국은 앞으로 제조거점은 물론 물류, 금융, 통신 등 인프라 투자와 상품기획 및 디자인 등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유럽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국의 유럽 시장 내 입지는 한-EU FTA에도 불구하고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FTA 체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유럽의 재정위기를 유럽 시장 진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관점에서 유럽 국채 매입 확대와 더불어 인프라 투자, 신성장 분야의 기업 인수 등에 나서야 한다.

최근 중국의 발 빠른 행보에 자극을 받은 일본정부는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이 발행하는 국채를 적극 매입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유럽에 진출할 경우에는 각국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고려한 접근전략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경우 중남미 시장 내 영향력을 활용하기 위해 스페인 산업계와 공동 진출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의 경우에는 한국의 최대 선박 수주시장으로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와 발칸반도 주변 국가 및 지중해 시장 진출 거점으

로서의 높은 활용도를 고려해 투자진출 및 전략적 제휴 등을 추진해볼 수 있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 EU 기후변화 규제 강화와 산업계의 대응

## EU industries' responses to strengthened environmental policies

Even though the industries of many European countries are relatively environmentally friendly compared to those of other major economies such as the US, EU's efforts to strengthen its environmental regulations continue. Its major tool to control the greenhouse emissions is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which will be strengthened and expanded to a wider set of industries from the third trading period starting in 2013. Such schemes provide new opportunities for businesses as they lay the foundation for a rapid growth of the green market and industries. The EU is using both carrots and sticks to provide incentives for enterprises to invest in green technology and many firms have already captured such opportunities. However, a number of industrial groups and corporations oppose further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hey have been affecting EU's efforts through lobbying and campaigning. However, it seems that it is inevitable for the EU to strengthen its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he future if it aims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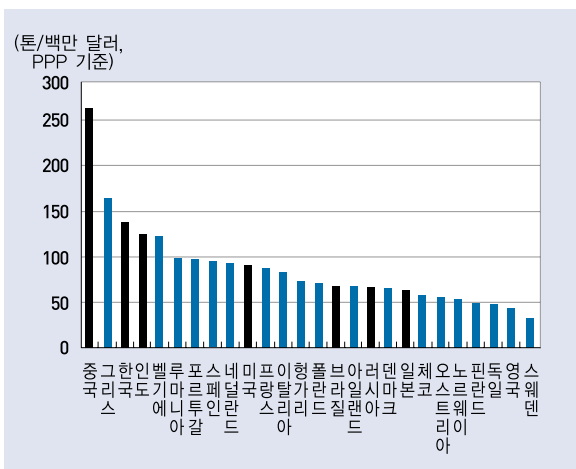
### EU의 환경 규제 강화

EU 회원국들의 산업은 비교적 친환경적이다. 산업규모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보면 북유럽 국가들과 제조업 역사가 긴 독일, 영국이 백만 달러당 50톤 미만을 기록하는 등 다수의 EU 회원국들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경제 수준이 낮은 중국과 인도는 물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보다 더욱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다.

1980년대 급격한 산업화로 발생한 산성비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중부 국가들의 산림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1986년에는 체르노빌에 위치한 원자로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렇듯 1980년대 유럽에서 기후 및 에너지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빈번해지자 EU 회원국들은 환경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산업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환경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정당들이 강력한 지지를 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9년에는 약 150명의 녹색당 당원들이 11개 EU 회원국에서 의석을 차지하며 입지를 넓혀나갔고 4개 회원국에서는 녹색당이 정부 구성에 참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다.<sup>1</sup>

<sup>1</sup> Vogel, D. (2003). The Hare and the Tortoise Revisited: The New Politics of Consumer and Environmental Regulation in Europ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 557-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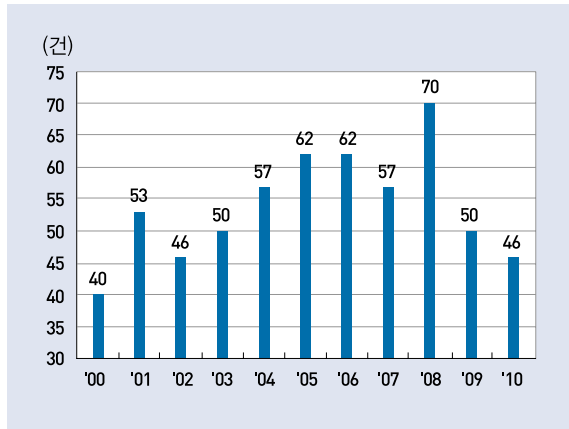
### ★ 산업규모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자료: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 Policy (2010), 2010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이와 동시에 EU는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환경규제 강화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해 EU 경제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EU는 이를 막기 위해 EU 차원의 규제 통합 및 강화를 모색하기 시작했고 1990년 유로바로미터 서베이는 EU 시민들 중 91%가 EU 차원의 환경보호정책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sup>2</sup> 1993년에 발효된 마스트리흐트조약은 친환경 성향이 강한 유럽의회에게 공동결정권한을 부여하며 EU는 환경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 ★ 환경 관련 2차 입법 발효 건수



자료: EUR-Lex 웹사이트 서치기능을 사용해 작성

EU 이사회의 환경법 관련 의사결정방식이 만장일치제에서 가중다수결제로 변경되며 EU 친환경 정당들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었다.<sup>3</sup>

또한 EU는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법의 국제화'를 주도했다. EU는 특히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 협상에서 의무이행 대상국들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대에도 EU의 환경규제 강화가 이어지며 환경 관련 2차 법안(규칙, 지침, 결정) 발효 건수가 증가했다.

### 규제 강화는 녹색산업 성장의 기회를 마련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EU 기후변화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GDP의 0.5% 미만에 불과하고 만약 EU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환경변화가 EU 경제에 미칠 장기적 비용은 10배 높은 수준이라고 예측하고 있다.<sup>4</sup> 또한 단기적으로는 환경규제 강

<sup>2</sup> Bomberg, E. (1998). *Green Parties and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London: Routledge.

<sup>3</sup> Barnes, P. M. & Barnes, I. (1999). *Environmental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ing.

화가 특정 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녹색산업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이 EU 집행위원회의 주장이다. 실제로 녹색제품시장은 매우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보고서는 세계 녹색제품 및 서비스 시장 규모가 2008년 1조 3,70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2조 7,4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up>5</sup>

EU 집행위원회는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들에게 녹색시장 진출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사용해 녹색산업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007년과 2013년 사이 약 100억 유로의 자금을 녹색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원과 규제 강화를 기회로 삼아 EU의 많은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T 기술을 전력망에 접목시키는 스마트 그리드 산업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재생 인프라 산업의 하나로, 풍력발전산업을 예로 들 수 있다. 국제풍력산업협회(GWEC)의 전망치에 따르면 2009년 158.5GW였던 세계 풍력발전 규모가 2030년에는 1,777.6GW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현재 약 8.5%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에는 20%까지 늘릴 계획이고, EU 집행위원회는 재생에너지 발전규모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25%에서 2020년 4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6</sup>

풍력발전 시장 확대에 의해 덴마크의 베스타스, 독일의 에너콘, 스페인의 가메사와 같은 EU의 주요 풍력 발전기 제조업체들이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노벨과 수즐론 등 신흥국의 풍력 발전기

<sup>4</sup> The Environmental Industries Commission (2008). *Reforming the budget, changing Europe*.

<sup>5</sup> UNEP (2008). *Green Jobs: Towards decent work in a sustainable, low-carbon world*.

<sup>6</sup> EU Commission (2010). *EU energy trends in 2030*. GWh 기준.







## ★ 2009년 기업별 신규 풍력 발전기 설치 규모

(단위: MW, %)

순위	기업	HQ	터빈 설치 규모(비중)
1	베스타스	덴마크	4,766 (12.9)
2	GE 윈드	미국	4,741 (12.8)
3	시노벨	중국	3,510 (9.5)
4	에너콘	독일	3,221 (8.7)
5	골드윈드	중국	2,727 (7.4)
6	가메사	스페인	2,546 (6.9)
7	동팡	중국	2,475 (6.7)
8	수출론	인도	2,421 (6.5)
9	지멘스	독일	2,265 (6.1)
10	RE파워	독일	1,297 (3.5)
	기타		7,034 (19.0)
	총		37,003 (100)

주: 2007년 수출론이 RE파워를 인수

자료: Global Wind Energy Council (2010), China Wind Power Outlook 2010.

생산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EU 기업들은 신흥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장변화<sup>7</sup>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 EU 자동차산업은 기후변화 규제 강화를 반대

환경규제 강화는 신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특정 산업 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친환경화를 위한 투자비용과 환경규제 적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증가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들마저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98년에 EU 집행위원회와 EU 자동차산업 단체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까지 140g/km(산업 평균)으로 감축하자는 골자의 자발적 협약에 합의했다.<sup>8</sup>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산업경쟁력

이 빠르게 강화되고 선진국들 중 최대 배출국인 미국<sup>9</sup>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3월 교토의 정서에서 탈퇴하자 EU 자동차산업은 환경규제 강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 EU 집행위원회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감축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자동차 배출량을 2012년부터 120g/km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BMW, 폭스바겐, 다임러 크라이슬러 등 중대형차를 주로 생산하는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규제 강화가 EU 자동차 공장 이전과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바호주 집행위원장에게 보냈다. 또한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EU의 자동차 배출량 규제가 대기오염 방지 관련 정책 가운데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ACEA는 EU가 규제를 강화할 경우 1,200만 명이 종사하고 있는 유럽의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해 유럽 경제와 자동차산업 기술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sup>10</sup>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군터 베르호이젠 기업 및 산업 담당 EU 집행위원도 자동차산업의 의견에 수긍하며 이산화탄소 규제 강화에 반대의를 표명했다. 결국 EU 집행위원회는 정치적 압력과 자동차산업의 로비에 배출 허용량을 130g/km으로 제안하였고, 관련 법안이 2008년 12월에 통과되었다. EU 주요국들의 탈산업화와 신흥국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요소로 작용하며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라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EU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EU 자동차산업은 배출량 규제 강화에 대비해 투자를 확대

EU의 감축 목표치는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 중 가장 강력한데, 최근 EU는 2020년 목표치를 95g/km

<sup>7</sup> 중국의 경우 풍력 발전 규모가 2006년 2.6GW에 불과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2009년에는 26GW를 생산해냈다. GWEC는 중국이 2020년까지 230GW의 전기를 풍력을 통해 생산해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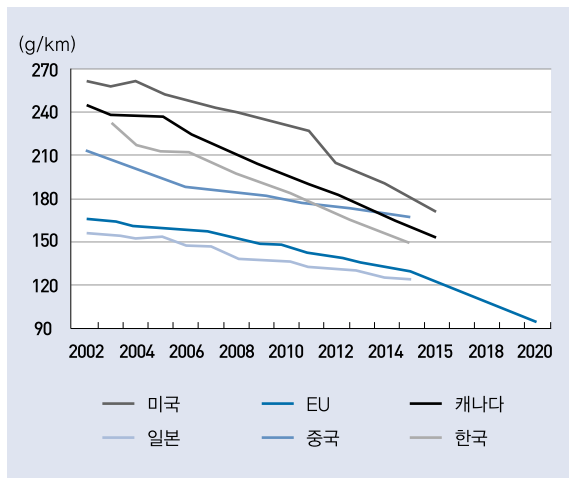
<sup>8</sup>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1998), Implementing the Community strategy to reduce CO<sub>2</sub> emissions from cars: an environmental agreement with the European automobile industry: COM/98/0495 final.

<sup>9</sup> 2008년 기준 중국은 65.5억 톤, 미국은 56.0억 톤, EU는 38.5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각각 세계 총 배출량의 22.3%, 19.0%, 13.1%를 차지.

<sup>10</sup>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2007), Car industry wants fact-based policy on CO<sub>2</sub> reductions.

로 규정하는 안전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는 EU에 비해 느슨하나 향후 이들 국가의 감축 목표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자동차 회사들은 세계적으로 저탄소 자동차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며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EU의 규제 강화가 EU 기업들의 기술이 다른 경쟁국들보다 한발 앞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 ★ 주요국들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목표치



주: 1) 2008년까지는 실제 배출량을 사용

2) 미국은 2011년, EU와 일본은 2015년 목표치를 법으로 규정

3) 미국은 2012년~2016년, 중국과 한국은 2015년, 캐나다는 2016년, EU는 2020년 목표치를 검토

자료: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2010, 4.), Global PV standards: April 2010 update.

더불어 EU 자동차 회사들은 신기술 개발을 위해 부품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BMW는 SB 리모티브(SB LiMotive: 독일 보쉬와 한국 삼성SDI의 협력벤처)의 리튬이온전지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양산할 계획인데, 현재 탄소소매를 사용해 신소재를 생산해내는 SGL 그룹과 협력벤처를 설립해 차체의 무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자동

차 회사들은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에 대비해 전기 인프라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다. 푸조-시트로엥은 프랑스 국영 전기공사인 EDF와 볼보는 스웨덴 국영 에너지 기업인 바텐폴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sup>11</sup>

## 향후 EU 기후변화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비즈니스유럽을 비롯한 여러 EU 산업단체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경쟁국들 간의 환경규제 불균형이 EU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2</sup> 특히 2009년 12월에 열린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만한 협정을 도출하는 데 실패하며 EU 산업의 우려는 더욱 심화되었다. EU는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코펜하겐에서 참여국들이 EU가 만족할 만한 감축 목표량을 제시할 경우 1990년 수준의 3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이보 드 보어 유엔기후변화협력 사무총장은 2010년에 열린 EU의회 청문회에서 온실가스 20% 감축은 EU에게 “누워서 떡먹기”라고 주장했다.<sup>13</sup> 그러나 감축 확대와 관련해 EU 역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2차 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유럽 국가들과 독일은 감축 목표치를 30%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2009년 기준 EU에서 가장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한 공장 30곳 가운데 12곳과 6곳이 각각 독일과 폴란드에 위치해 있다. 반면 덴마크, 스웨덴을 비롯한 다수의 서유럽 국가들과 EU 집행위원회는 규제 강화가 녹색성장과 기술혁신에 인센티브로

<sup>11</sup> KPMG (2010), The transformation of the automotive industry: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effect.

<sup>12</sup> Business Europe (2010, 12, 26.), Priorities for international climate policy.

<sup>13</sup> De Boer: EU 2020 climate targets 'a piece of cake', (2010, 4, 16.), EurActiv.





## ★ EU 10대 공해유발공장(탄소 배출량 기준)

(단위: 백만 톤)

순위	국가	기업	탄소배출량
1	폴란드	BOT 일렉트로니아	29.5
2	독일	RWE AG	26.3
3	독일	바텐폴(스웨덴)	23.3
4	영국	드렉스 그룹	19.9
5	독일	RWE AG	19.0
6	독일	RWE AG	17.9
7	독일	RWE AG	16.8
8	이탈리아	에넬	13.0
9	그리스	퍼블릭 파워	12.9
10	독일	바텐폴(스웨덴)	12.8

자료: EU's "dirty 30" carbon dioxide emitters in '09 (2010. 4. 6). Reuters.

작용할 것이라며 이를 지지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EU가 온실가스 30%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이 2020년 기준 연 810억 유로(GDP 대비 0.54%)에 불과하다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다.<sup>14</sup> 스톡홀름 환경 연구소의 보고서에서도 EU가 적절한 정책을 도입할 경우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40%, 그리고 2050년까지 90% 감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15</sup> 여러 NGO들과 EU 의회의 녹색당은 온실가스를 40%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EU는 205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95% 감축을 목표로 두고 이에 필요한 자원 효율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 관련 계획을 담은 에너지 로드맵 2050을 2011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sup>16</sup>

## 유럽배출권 거래제 확대

EU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2005년에 유럽 배출권거래제(EU ETS: EU Emissions Trading

System)를 도입했다. EU ETS는 EU 27개 회원국들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의 총 30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EU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약 40%를 차지하는 1만 1,000여 개의 공장이 탄소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EU ETS에 참여하는 공장은 전력발전소와 기타 연소공장, 정유공장, 석탄 제조 공장, 제철공장, 제강소 및 시멘트, 유리, 라임, 벽돌, 세라믹, 펄프, 제지 공장에 국한되어 있다.

배출권 거래제 1차 이행 기간(2005~2007년)과 2차 이행 기간(2008~2012년)은 회원국들이 국가 및 자국 산업의 할당계획을 결정해 EU집행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ETS는 할당량이 국가별로 분산되어 운영방식이 복잡하고 불투명해 산업의 불확실성을 확대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차 이행 기간(2013~2020년)부터는 배출권을 EU 차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로 인해 탄소거래 관련 분야에서 EU의 권한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12월에 통과된 ETS 개선 법안<sup>17</sup>은 2013년부터 EU 산업의 총 탄소배출 할당량을 연 1.74%씩 축소시켜 2020년에는 2005년의 79%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목표치 달성을 위해 2012년부터는 항공산업, 2013년에는 석유화학, 압모니아, 알루미늄 산업에도 ETS가 적용될 예정이다. 더불어 2020년까지 ETS에서 제외되어 있는 수송업, 건물, 농업, 폐기물처리산업에도 2005년 수준 대비 10%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EU는 민감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해 배출권 할당 제도를 무상분배와 유상분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배출권의 무상분배 비중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차 이행 기간에는 거의 모든 배출권이 무상으로 할당되었으나 3차 이행 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에는 절반 수준이 유상으로 할당될 것으로 예상된다.<sup>18</sup> 발전소 배출권의 경우 2013년부터 100%가 유상으로 제공된다. 신규 회원국들의 발전소에는 발전기 시설을 현대화한다는 조건하에 2013년에 최대 70%가 무상으로 분배되고 2020년에는 기존 회원국들과 같이 100%가 유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sup>19</sup> ETS가 적용되는 여타 산업에서는 2013년에 2005~2007년 수준의 80%가 무상으로 할당된다. 더불어 EU는 2020년까지 무상분배 비율을 30%로 줄여나가고 2027년까지 모든 배출권을 유상으로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배출 규제가 느슨해 온실가스 절감 비용이 낮은 지역으로 기업들이 공장시설을 이전(carbon leakage)할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집약적 산업들에게는 예외적으로 배출권을 무상분배할 예정이다.

## 녹색제품 관세 인하를 통한 교역 활성화

EU 산업계 일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규제 강화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없을 경우 개별 회원국들이 자국의 산업구조를 고려해 규제 강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규제를 산발적으로 도입할 경우 회원국들 간의 최소 규제 경쟁을 초래할 수 있고 EU가 주도하는 '환경법의 국제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이를 피하기 위해 현재

신규 회원국들에게 주는 특혜조항을 당분간 계속 유지하고, EU 회원국들이 녹색산업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탄소세 도입에 대해서는 녹색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의견을 일부 수렴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10년부터 독자적으로 탄소세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그 법안이 위험판결을 받아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철회 후 프랑스 정부는 이미 탄소세를 도입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의 지지를 받으며 EU 차원의 녹색관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월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감사 담당 집행위원은 온실가스 1톤당 20유로의 세금을 ETS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산업분야들은 물론 농업과 가정에도 부과하자는 제안을 했다. EU 산업계와 신규 회원국들은 이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sup>20</sup> 추가적으로 EU 집행위원회는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EU로 수입될 경우 탄소관세를 부과하는 안건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EU의 탄소관세 도입은 무역전쟁을 초래할 수 있고 모니터링과 보고체계에 상당한 비용과 절차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녹색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녹색제품 교역을 활성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EU는 자발적 관세 인하 협약인 녹색제품협약(GTA: Green Technology Agreement)<sup>21</sup>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sup>16</sup> EU Commission (2011). Public consultation: Energy Roadmap 2050. <[http://ec.europa.eu/energy/strategies/consultations/20110307\\_roadmap\\_2050\\_en.htm](http://ec.europa.eu/energy/strategies/consultations/20110307_roadmap_2050_en.htm)>

<sup>17</sup>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2009. 5. 6.). Directive 2009/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mprove and exte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scheme of the Community.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140(63).

<sup>18</sup> European Commission ETS- Auctioning 웹사이트

<[http://ec.europa.eu/clima/policies/ets/auctioning\\_en.htm](http://ec.europa.eu/clima/policies/ets/auctioning_en.htm)>

<sup>19</sup> European Parliament (2010).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http://www.europarl.europa.eu/parliament/expert/displayFtu.do?language=en&id=73&ftuid=FTU\\_4.10.7.html](http://www.europarl.europa.eu/parliament/expert/displayFtu.do?language=en&id=73&ftuid=FTU_4.10.7.html)>

<sup>20</sup> Europe considers new taxes to promote 'clean' energy. (2010. 6. 22.). *The New York Times*; EU carbon tax proposal delayed. (2010. 6. 25.). *EurActiv*.

<sup>21</sup> 김화년 외 (2010). "녹색제품협약(GT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유럽안정화기구 설립을 위한 리스본조약 개정 절차

## Amending the Lisbon Treaty to enable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On 17 December 2010, the European Council agreed to create a new permanent crisis mechanism called the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Currently the Lisbon Treaty does not have a legal basis on which the ESM can be established. This means that an amendment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is required for the ESM to become operational as of mid-2013. There are two ways of amending the TFEU under Article 48(6). The treaty can be amended through either the Simplified Revision Procedure or the Ordinary Revision Procedure. As the former is simpler and less time consuming than the latter, it is certain that the SRP will be used to amend Article 136 TFEU, which is in Chapter 4 “Provisions specific to Member States whose currency is the euro”.

### 유럽안정화기금 설립과 리스본조약의 개정

2010년 12월 17일,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운영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유럽안정화기금)’이라 불리는 상설금융위기기금(a permanent financial crisis mechanism)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ESM은 유로화 회원국 가운데 재정위기에 직면한 국가에게 구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상설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

EU는 이미 2010년 5월에 EU-IMF 기금(EU-IMF mechanism)의 형태로 한시적 기구인 ‘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유럽재정안정기금)’를 설립한 바 있는데, EFSF는 2013년 6월까지만 활동한 뒤 ESM에 흡수된다. 그러나 리스본조약에 ESM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13년 7월부터 ESM이 설립되어 활동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2009년 12월 1일자로 발효한 리스본조약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유럽이사회로부터 리스본조약 개정에 관한 검토를 요청받은 헤르만 판롬파위(Herman Van Rompuy)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은 다음과 같이 TFEU 제136조 3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유로를 통화로 하는 회원국은 유로지역 전체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정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기금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금융지원은 엄격한 조건에 기속된다(*The Member States whose currency is the euro may establish a stability mechanism to be activated if indispensable to safeguard the stability of the euro area as a whole. The granting of any required financial assistance under the mechanism will be made subject to strict conditionality.*).

유럽이사회는 이러한 판롬파위의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러자 과연 리스본조약에 규정된 어떤 개정 절차를 거쳐 TFEU 제136조 3항을 신설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하였다.

### 리스본조약의 개정 절차: TEU 제48조

리스본조약의 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TEU(Treaty on European Union, 유럽연합조약) 제48조에 따르면, 이 조약은 ORP(ordinary revision procedures, 보통개정절차)와 SRP(simplified revision procedures, 약식개정절차)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sup>1</sup>

<sup>1</sup> TEU 제48조 1항.

### 1. 보통개정절차

ORP는 각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또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이사회에 TEU 및 TFEU의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개정안이 제출되면 이사회는 이를 유럽이사회에 송부하고, 각 회원국의 국내 의회에도 통지해야 한다. 개정하려는 내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고, 리스본조약에서 EU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확대 또는 축소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sup>2</sup>

유럽이사회는 유럽의회 및 유럽 집행위원회와 협의한 후 개정안의 검토를 단순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때 유럽이사회 의장은 각 회원국 국내 의회,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 유럽의회 및 유럽 집행위원회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자문회의(a Convention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Parliaments, of the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mmission)를 소집한다. 특히 통화 분야의 기구 변경 시에는 유럽중앙은행과 협의해야 한다.

자문회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동의절차에 따라 회원국 정부대표자회의(a Conference of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s of the Member States)<sup>3</sup>에 대해 권고한다.<sup>4</sup>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문회의가 소집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계획되어 있는 개정의 범위에서는 소집이 정당화될 수 없을 때(not to convene a Convention should this not be justified by the extent of the proposed amendments)’ 유럽이사회는 자문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데 대해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

은 후 단순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유럽이사회는 회원국 정부대표자회의의 위임사항을 정한다.<sup>5</sup>

개정된 리스본조약은 모든 회원국이 그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 비준한 후 발효한다.<sup>6</sup> 그런데 리스본조약은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회원국에 의해 비준이 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리스본조약을 개정하는 조약의 조인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고 회원국의 5분의 4가 이 개정조약을 비준하였지만, 하나 또는 복수의 회원국에서 비준에 어려움이 발생한 때에는 유럽이사회가 이 문제를 토의한다.<sup>7</sup> 이 규정은 그동안 기본조약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에 의한 비준 부결을 경험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결국 비준 부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유럽이사회는 ‘정치적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 2. 약식개정절차

리스본조약은 SRP에 의해서도 개정될 수 있다. SRP도 각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 또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조약의 개정안을 유럽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개정절차가 개시된다. 그러나 SRP는 ORP와 달리 개정의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EU의 역내 정책 및 행동 분야에 관한 TFEU 제3부의 규정이 개정의 대상이 된다. 물론 제3부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sup>8</sup>

유럽이사회는 TFEU 제3부의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결정을 제정할 수 있다. 유럽이사회는 유럽의회 및 유럽 집행위원회와 협의한 후에, 통화 분야의 기구 변경 시에는 유럽중앙은행과 협의한 후에 전원일치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각 회원국의 헌법상의 요청에 따른 동의를 얻은 후에 발효한다.<sup>9</sup> 하지만 유럽이사회회의의 결정은 리스본조약의 범위 내에서 연합

<sup>5</sup> TEU 제48조 3항 2단.

<sup>6</sup> TEU 제48조 4항 1단.

<sup>7</sup> TEU 제48조 5항.

<sup>8</sup> TEU 제48조 6항 1단.

<sup>9</sup> TEU 제48조 6항 2단.

<sup>2</sup> TEU 제48조 2항.

<sup>3</sup> 회원국 정부대표자회의는 리스본조약의 개정에 합의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TEU 제48조 4항).

<sup>4</sup> TEU 제48조 3항 1단.







# 기억문화를 통한 유럽의 정체성 찾기

## Searching for Europe's identity through a common memory culture

The main driver of European integration has been the economic benefits that came with opening up their borders, but the ideational power has also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Societies derive from their collective memory of past glories and sacrifices made on their behalf and collective memory is an important force in shaping the history. For this reason, the collective recognition of past memories has a significant meaning when we talk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gration of the European Union. However, the definition of “being European” and EU's desired future directions and goals are ambiguous and they depend primarily on people's country or region of origin. Therefore, the memory maintenance, i.e. how European's collective memories have been defined and developed, is a political and strategic process. In order for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to integrate more strongly, it is important that they develop a non-economic identity that is based on pan-European collective memories.

### EU를 지지하는 공동의 정체성

유럽 통합의 동력이 된 것은 경제적 요소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분명 관념적인 힘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적인 힘은 향후 EU가 지속적으로 기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EU 가입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확신 하 나로는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에 부족하므로 유럽 전체를 아우르는 관념적인 힘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유럽헌법에서의 기독교 유산에 대한 언급 여부나 터키의 EU 가입 문제를 둘러싼 유럽 내의 논의를 보면, 유럽인들이 스스로의 집단적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가 유럽의 향후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에 EU는 초국가적 정체성을 문화적인 단계로까지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 사회, 교육 등 다방면에서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sup>1</sup>

그런데 ‘유럽적’이라는 개념의 정의에서부터 EU가 추구해야 할 발전 방향과 궁극적인 목표의 규정에

이르기까지 EU에 대한 평가와 구상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앞서 언급한 터키에 대한 논의도 국가와 지역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다. 터키가 EU에 가입하는 것을 찬성하는 독일 사람들은 터키가 이슬람과의 가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터키의 EU 가입이 거의 개종을 전제한다고 보는 프랑스인들은 터키의 이슬람과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는다. 또한 프랑스 내 터키의 EU 가입 반대자들은 터키가 1915년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사건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독일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독일은 사건의 배경인 1차 대전 당시 오스만제국과 동맹국이었고, 더구나 인종학살의 과거를 굳이 재확인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부각되지 않는다. 유럽의 정체성은 이렇듯 다양한 인식 차이 속에서 지역적, 국가적 정체성과 공존해야 하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존하는 대립을 극복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정치와 제도상의 형식적 정체성을 지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유럽정체성은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다. 유럽정체성 담론을 이끄는 맥은 공통성 혹은 유사성, 공유, 다양성 등의 개념이다. 정체성 담론은 크게 두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유럽정체성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논의로 ‘유럽적인 것’의 근원으로 문화와 유럽적 가치를 조명하면서 지리적

<sup>1</sup> Haack, Y. (2010). *Europäische Integration durch transnationale Strategien der Regionenbildung? Grenzüberschreitende Zusammenarbeit im böhmisch-bayerischen Grenzgebiet*. Dr. phil., Universität Passau.

상징적인 활동을 통해서 초국가적 정체성이 만들어지는데, 문화적 혹은 상징적인 정체성 단계는 형식적인 단계와 물질적인 단계 다음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된다.

에게 부여된 권한을 확대할 수는 없다.<sup>10</sup>

전원일치에 의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TFEU 또는 TEU 제5편(연합의 대외적 행동에 관한 일반규정 및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어떤 분야 또는 특정한 경우에 전원일치로 행동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유럽이사회는 이사회가 당해 분야 또는 당해 경우에 가중다수결로 행동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정책 및 방위정책과 관련된 결정에는 가중다수결을 적용하는 결정이 적용될 수 없다.<sup>11</sup> 또한 TFEU가 특별입법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럽이사회는 보통입법절차에 따라 이 법률의 제정을 허용하는 결정을 제정할 수 있다.<sup>12</sup>

위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유럽이사회가 행한 모든 발의는 회원국의 국내 의회에 통지된다. 이 발의가 통지된 후 6개월 이내에 회원국의 국내 의회에 의해 거부될 때는 위 의사결정에 관한 결정은 제정될 수 없다. 이 발의가 거부되지 않는다면 유럽이사회는 당해 결정을 제정할 수 있다.<sup>13</sup> 유럽이사회는 위 의사결정에 관한 결정을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유럽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전원일치로 제정한다.<sup>14</sup>

### 유럽안정화기금 설립을 위한 리스본조약의 개정 절차 전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는 리스본조약의 전면적인 개정이나 권한 배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ORP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ORP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EU 당국과 각 회원국의 정상들이 당면한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그 헌법상의 요청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ORP를 이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렇다면 EU 당국은 결국 SRP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한다.

첫째, SRP는 ORP와 달리 개정의 범위가 제한된다. 즉 SRP에서는 EU의 역내 정책 및 행동 분야에 관한 TFEU 제3부의 규정이 개정 대상이 되는데, 통화·금융 정책이 이에 포함된다.

둘째, SRP는 TFEU 제3부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개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이사회는 TFEU 제3부의 규정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하는 결정을 제정할 수 있다.

셋째, ORP에 비해 SRP의 동의절차가 간편하다. ORP는 개정된 리스본조약을 모든 회원국 내의 헌법상 요청에 따른 비준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SRP는 유럽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유럽이사회가 전원일치로 개정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처럼 ORP에 비해 SRP는 여러 면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리스본조약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유럽이사회는 ESM 설립에 관한 TFEU 제136조를 개정할 때 SRP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

채형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up>12</sup> TEU 제48조 7항 2단.

<sup>13</sup> TEU 제48조 7항 3단.

<sup>14</sup> TEU 제48조 7항 4단.

<sup>10</sup> TEU 제48조 6항 3단.

<sup>11</sup> TEU 제48조 7항 1단.

역사적·문화적 유사성과 가치의 유사성을 언급한다. 다른 하나는 유럽정체성 형성과 축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인데, 여기에서는 유사성 논의에서와는 달리 유럽에 공존하는 종교와 문화, 민족과 전통의 다양성 자체를 유럽정체성의 본질로 보고, 다양성의 보존과 공유를 위해 공동으로 추구해나가야 할 목표를 제시한다.

### 유럽의 집단적 기억과 정체성

“국가를 형성하는 것은 공동의 기억유산”이라는 르낭의 정의에 근거하자면<sup>2</sup> 하나의 길을 가려는 새로운 유럽은 궁극적으로는 초국가적인 기억공동체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기억을 통해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재확인해가는 과정은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한 사회가 과거에 대해 공유하는 기억은 집단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기억관리’는 매우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것으로, 경제나 권력의 분배 못지않게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여겨진다. 집단적 기억이 탄생하고 변천하여 전승되는 과정, 즉 누가, 왜, 어떻게 기억을 만들어가는지는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집단적 기억을 표출하는 방식은 사회마다 다르며, 같은 사회에서도 역사적으로 변천을 겪는다. 따라서 각자의 특수한 기억을 갖고 있는 다양한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어떤 특정한 집단의 기억이 보편적 기억으로 자리매김하거나, 인위적인 ‘기억작업’을 통해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객관성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유럽적 기억은 대개의 경우 국가적인 프리스마를 통해 굴절된다. 초국가적인 역사적 사건들을 해석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각자 자신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국가마다 관점이 다르다. 국민국가 형성 시기에는 이러한 기억 작업이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의 기억문화를 위해서는 각국의 기억문화들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서로 엮여 있는지 밝혀내고, 각 기억문화가 어떻게 서로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지, 결국에는 어떻게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통합 과정에서 유럽 각국의 기억문화는 일정한 방향성을 드러낸다. 여전히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족적, 국가적, 지역적인 관점과 병행하여 과거에 대한 유럽적 차원의 관점이 점점 의미를 더해가는 경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의 한 예로 유럽 각국의 역사교육에서 유럽적 차원이 점차 부각되어가는 것을 들 수 있다. 수십 년간 각국의 역사교과서들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정화’되어왔다. 그러나 스스로 유럽 역사교과서의 전 단계라고 규정하고 있는 독일-프랑스 역사교과서처럼 이제는 각 나라의 역사를 유럽적 차원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구성원들의 기억의 뿌리를 찾는 ‘기억의 장소’

기억의 장소는 의례나 기념물, 영웅과 더불어 집단적 기억을 위한 대표적인 매개체로 꼽힌다. 이들 매개체는 모두 한 시대의 집단적 정체성을 표출하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역사성을 지닌다.<sup>3</sup> 유럽정체성과 관련한 기억의 장소 논의의 핵심은 유럽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기억 조각들에 유럽적 의미를 부여하고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프랑스인들의 ‘정체성 찾기’ 운동을 배경으로 역사학계에서 기획되었던 ‘기억의 장소(Lieux de mémoire)’에 대한 목록화 작업(1984~1992년)은 집단적 기억의 장소에 역사성을 부여한 대표적인 예로 언급된다.<sup>4</sup> 여기서 기억의 장소는 국가의 역사와 집단적 기억을

구성하는 대표적 요소 중 하나로 정의된다. 프랑스라는 국가사회를 하나로 지탱하고 있는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가 프랑스 국민의 기억의 결정체로서의 장소를 매개로 하여 기술된다. 물질적·비물질적 기억들이 마치 그물처럼 얹혀 국민의식을 견고하게 하나로 빚어낸다는 것이다. 이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러한 기억 찾기 작업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작업들에서 볼 수 있듯이 집단적 기억을 담고 있는 장소의 의미는 보통 민족국가적이며 지역적이다. 기억문화의 조성과 전승을 위한 작업 역시도 국가사회나 지역사회 단위로 이루어진다. 아우슈비츠처럼 그 역사적 의미가 다분히 범유럽적이고 초국가적인 경우에도 그러하다. 아우슈비츠는 한편으로는 유럽적이고 초국가적인 기억의 장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 폴란드인, 헝가리인, 독일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네덜란드인, 미국인 등 각 그룹마다 각기 다른 연상과 인식, 다른 구조의 의미와 연계된 기억의 장소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억에 대한 국가적 의미를 어떻게 유럽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 ‘유럽공동의 기억문화의 형성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누군가에게는 승리의 장소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패배의 장소인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기억의 장소들이 모든 유럽인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초국가적인 유럽 공동의 기억

유럽문화수도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럽적 기억의 장소에 대한 논의가 지향하는 바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지역적·국가적 의미 이상의 기억이 숨 쉬고 있는 장소들에 유럽적인 가치를 유도해내고 부각시켜 유럽적 기억의 장소로 공유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해당 역사적 사건이 이미 범유럽적인 의미를 갖는 장소와 더불어, 얼핏 보면 특정한 지역의 사건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럽적 기억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장소가 모두 포함된다.

멀게는 그리스-페르시아전쟁의 큰 전환점이었던 살라미스해전의 무대인 살라미스 해협에서부터 가깝게는 홀로코스트의 악몽에 얹힌 아우슈비츠, 아직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철의 장막 붕괴의 시작을 알렸던 오스트리아-헝가리 국경의 소프론(Sopron)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홀로코스트 기념비 공원으로도 잘 알려진 베를린 중심가의 유대인학살추모공원(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은 범유럽적 의미를 갖는 예이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아니라 단지 유대인 학살 사건을 기억으로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다. 즉, 장소 자체에 역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억의 장소인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나 헤르체고비나의 스타리모스트(Stari Most)<sup>5</sup>는 일차적으로는 특정한 지역의 사건이나 근본적으로는 유럽적 기억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건의 장소로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억을 유럽이 공유할 수 있는 매개체다.

한편 전혀 새로운 유럽적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가는 장소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럽의 지리적 중심부이다. 현재 EU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EU의 중심점은 겔른하우젠-메어홀츠(Gelnhausen-Meerholz)에 있다. 북위 50° 10' 21", 동경 9° 9' 0"인 이 지점에 조성된 기념물의 핵심은 속이 비어 있는 둥근 석조물이다. 그 안에는 상징적인 의례를 통해 27개 회원국에서 가져온 흙이 채워져 있고, 기둥에 새겨진 26개의 선이 각 회원국의 지리적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EU의 현재가 그러하듯 이 석조물 또한 완

<sup>2</sup> Renan, E. (1996). *Was ist eine Nation? Rede am 11. März 1882 an der Sorbonne*. Europäische Verlagsanstalt.

<sup>3</sup> 정근식 (2003). “집단적 기억의 복원과 재현”, 『4·3과 역사』, 3, 146-174.  
<sup>4</sup> 이하 설명은 편집 번역본 Nora, P. (ed.). (2005). *Erinnerungsorte Frankreichs*. München: C. H. Beck Verlag.에 의거한다.

<sup>5</sup> 'Stari Most'는 세르보크로아티아어로 '오래된 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오스만투르크 점령 때 9년에 걸쳐 건설된 아치형 석조 다리로, 다리 아래로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지역을 연결하는 네레트바 강이 흐른다. 200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성된 상태가 아니라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이 열리도록 제작되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석조물에 또 다른 흙이 채워짐과 동시에 새로운 중심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다른 두 개의 중심부들이 지나쳐갔다. 마치 유럽 통합 역사의 어느 한 시점을 대표하는 중심점으로서 기억될 장소처럼 말이다.<sup>6</sup>

### 다양성의 공유를 통한 인정과 이해

유럽적 기억의 장소가 지향하는 두 번째 목표는 초국가적 기억의 장소를 매개로 하여 타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대부분 기억의 장소에는 그 기억에 관계된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와 해석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드러냄으로써 타자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억의 다양성을 공유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리적 의미가 특별한 장소, 즉 경계지역이 큰 의미를 갖는다.

EU에 대한 기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수식어 중 하나인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경계가 많음’을 함축한다. 즉, 유럽 내 경계는 문화적·민족적 다양성에 대한 공간적 표출인 것이다. 분리와 갈등의 상징인 경계, 서로 다른 주체 간에 갈등의 근원이나 계기가 되는 경계에 대한 경험은 비단 유럽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하는 기억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 소프론을 비롯하여 쉥겐 협정에 대한 기억인 유럽기념비가 서있는 룩셈부르크-독일-프랑스 국경지대 쉥겐(Schengen), 독일과 프랑스 총리가 만나 전쟁희생자를 추모했던 베르덩(Verdun) 등 수많은 경계지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날 유럽에서 경계는 서로 다른 것들의 만남과 소통이라는 새로운 기억이 덧칠될 수 있는 가능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런데 역사적 기억의 장소들로서의 경계지역은 비록 드러나는 분쟁과 갈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역사적으로 서로 분리된 채 보전되어온 상이한 기억들에 유럽적 공동 기억이 새로 입혀지는 작업이 위의 예들에서처럼 항상 ‘분쟁의 과거→화해→공동의 기억’ 수순으로 진행될 수는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작게는 옛 공국 슐레스비히의 북부와 남부를 나누는 경계이자, 크게는 북유럽과 유럽대륙의 경계이기도 한 덴마크와 독일의 국경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슐레스비히’로 불리는 이곳은 국민국가 형성 시기 분쟁의 역사와 현재의 독특한 정치·사회적 구도와 관련하여 다각도로 조명되어온 경계지역이다. 덴마크는 이 지역을 자신들의 국민국가적 기억의 장소로 선택하여 보존하고 있으며, 경계의 극복과 재해석이 아니라 경계가 있음에 대한 인정과 확인이 극히 중요한 덴마크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 저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슐레스비히 전쟁 이후 ‘잃어버린 땅’이 되어버린 슐레스비히와 1차 대전 후에도 ‘되찾지 못한’ 남슐레스비히에 대한 기억이다. 그리고 그 기억은 대륙과의 거리감을 분명히 하면서 스칸디나비아 쪽으로 친화성을 강조하는 덴마크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다. 또한 이웃한 거대국에 대한 두려움과 얹혀 향후 독일과 유럽대륙을 대하는 덴마크의 자세로 지속적으로 표출된다.

덴마크가 유럽 통합 과정에서 유럽의 시장구조에 편성하는 것에는 관대했던 반면, 그러한 참여가 정치적인 연합 즉, 초국가적인 지배구조로까지 발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슐레스비히의 예는 초국가적 기억의 장소가 유럽적 의미로 확대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화해를 통해 과거의 갈등을 극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억의 상이함 자체를 존중하고 다양한 기억이 공존할 수 있는 적절한 소통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유럽 통합을 정신적, 문화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유럽정체성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뒤에는 국민국가 간 경계가 생기기 전에는 무엇인가 그 수많은 경계를 초월한 기억이 있었다는 인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을 바탕으로 하여 탈경계적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것은 EU가 추구하는 공동의 유럽정체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길일 것이다. 기억의 장소에

대한 논의에는 개별적인 기억문화를 아는 것이 유럽 공동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만들어 줄 것이며, 차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공동의 소속감을 성장시킬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

이원경 연세대학교 동서문재연구원 연구교수

<sup>6</sup> 1996년에서 2004년까지의 중심부는 벨기에의 Viroinval (북위 50° 0' 33", 동경 4° 39' 59")였으며, 2004년부터 2007까지의 중심부는 독일의 Kleinmaischeid (북위 50° 31' 31", 동경 7° 35' 50")였다.



# 유럽 정부부채의 위험성과 해결 방안

## EU's sovereign debt crisis and lessons from the Past.

The European Central Bank has recently published two papers on government debt while the sovereign debt crisis lingers on in Europe. The first paper “The Impact of High and Growing Government Debt on Economic Growth” discusses the effects of government debt on individual member countries’ GDP per capita during the past 40 years. The second paper “Major Public Debt Reductions: Lessons from the Past, Lessons for the Future” identifies factors determining major public debt reductions between 1985 and 2009. The major issues which are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he EU are the economic effects of the sovereign debt crisis and the solutions that can be implemented to minimise the negative impacts.

유럽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문제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이 정부부채와 관련한 보고서 두 편을 연달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하나는 지난 40년 동안 유로화 국가들의 1인당 GDP 성장에 정부부채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연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5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해 정부부채의 감소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한 것이다. 즉, 현재 유럽 경제의 최대 화두는 지금의 정부부채 문제가 앞으로 유럽 경제의 발목을 붙잡을 것인지에 대한 거시적 문제와 함께 그것을 막기 위해 어떠한 부분을 수술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현실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우선 정부부채 문제가 유럽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유럽중앙은행은 이를 단기적인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정부부채가 GDP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것은 부채 비율이 GDP의 70~80%를 넘기 시작할 때부터이며, 부채가 GDP의 90~100%를 넘어가게 되면 장기적 성장에도 여러 방향으로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수치는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기록하고 있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부채라고 해서 무조건 경제성장에 해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세기 이후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유럽 국가 역시 정부 주도의 계획과 지출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기반 시설을 만들었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

서의 결과를 가지고 “GDP의 90~100%를 넘지 않는 수준의 정부부채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므로 이를 잘만 사용하면 경제 성장을 이끄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반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40년 동안 12개 유럽 국가의 경험을 미뤄볼 때 대부분의 정부부채는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의 성격으로 활용되기보다는 단순 정부 지출의 형태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 기반 시설을 완비한 국가들의 정부부채는 이러한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부채 증가가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경로—개인저축, 공공투자, 총 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그리고 장기 국채의 명목·실질 이자율—중 개인저축과 공공투자 요소를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의 과대 지출에 따른 부채가 국가의 장기적 경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GDP의 90~100%를 넘지 않는 수준의 정부부채도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정부 지출을 늘려 당장의 경제적 성과를 내겠다는 포퓰리즘적인 공약을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부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부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역사상 검증된 정부부채 감소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답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정부부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은 사회복지비용과 공공임금 삭감을 통한 정부지출의 감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과의 타협안에 따른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과감한 삭감이 장기적으로 더욱 효과적이라고 분석하였다. 반대로 세입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노력은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덧붙이고 있다.

또한 유럽 15개국의 지난 15년간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이러한 정부 지출 감소가 GDP 증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만한 GDP 성장에 기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부 지출을 줄여나갈 때 나타날 수 있는 단기적인 경제 침체 현상이 경제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지속적인 정부 지출 감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영향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기적인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므로 당장 정부 지출을 줄이기 힘들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은 경험적으로 증명되

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가장 시급한 유럽의 선택은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처방을 내놓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15~40년 가까운 기록을 분석하여 유럽의 재정위기를 분석한 두 연구결과물이 한 목소리로 정부부채의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이것이 해결되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European Central Bank (2010). The Impact of High and Growing Government Debt on Economic Growth; European Central Bank (2010). Major Public Debt Reductions: Lessons from the Past, Lessons for the Future.) ★

정민경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 2011년도 다양한 대외 행사 준비

### Yonsei-SERI EU Centre's outreach activities in 2011

Yonsei-SERI EU Centre is planning to hold various events in 2011. In February, the Centre will hold a Brussels Forum which will consist of a number of in-depth lectures designed for a specific type of audience. The aim is to reach out to a new group of policy makers and specialists on top of our already existing audiences by giving lectures on topics of their interest. The Centre will also hold a business symposium on March, 2 with an aim of providing a venue for experts to share their views on the changes in the trade environment between Korea and the EU before the Korea-EU FTA comes into force. We will invite experts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and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to this event. Also, Yonsei-SERI EU Centre has been chosen by the Korea Foundation as a joint host of the Korea-EU Forum, which will be held in Paris.

Yonsei-SERI EU Centre is planning to strengthen its relationship with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U-related institutions. On January 21-22, we participated in the "EU-Asia Strategic Partnership Symposium", which was held in Singapore and we will also participate in the Roundtable of the EU Centres in Asia in 2012. We will support the Institute of European Society and Culture when they hold their next seminar under the title "Cultural integration in the EU: Presence and future" on February, 18. Also, we will visit Taiwan to participate in the seminar "The Future of European Integration and EU-Asia Relations" which will be hosted by the EU Centre in Taiwan on February 22-23.

Yonsei-SERI EU Centre is planning to host more events and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seminars in order to act as a key link between the EU and Korea. We will post the details of our activities on our website, which is currently under maintenance in order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but our visitors will still be able to read the news, reports and other publications in the previous format.



## 2011년도 다양한 대외 행사 준비

### Yonsei-SERI EU Centre's outreach activities in 2011

연세-SERI EU센터는 2011년도를 맞아 더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였다. 우선 2월 말에는 독자층을 발굴해 맞춤형 EU 강의를 진행하는 '브뤼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이미 확보된 독자만이 아니라 EU에 관심이 있는 새로운 그룹을 조직해 그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이슈에 따라 주제를 정하는 새로운 형태의 포럼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월 2일에는 2011년 발효 예정인 한-EU FTA에 따른 한-EU 간 무역환경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한국경제연구원, KOTRA 등 다양한 부문의 발표자를 모시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비즈니스 심포지엄을 주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 교류재단(Korea Foundation)에 공모한 한-EU 포럼의 공동주최기관으로 연세-SERI EU센터가 선정됨에 따라 2011년도에 제1차 한-EU 포럼을 파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연세-SERI EU센터는 국내외 다양한 EU 관련

조직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22일에는 싱가포르 EU센터가 주최하는 "EU-Asia Strategic Partnership"에 참가하였으며, 2012년 아시아 지역 EU센터 라운드테이블을 연세-SERI EU센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오는 2월 18일에는 유럽 사회문화연구소가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 '유럽연합 문화통합의 현재와 미래'에 후원을 하기도 한다. 또한 2월 22일~23일부터 대만 EU센터가 주최하는 워크숍 'The Future of European Integration and EU-Asia Relations'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양한 행사를 현재 계획 중이며, 행사와 관련된 상세사항은 EU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EU센터는 EU에 관한 자료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EU센터 홈페이지를 리뉴얼하고 있다. 홈페이지 업데이트 기간 중에도 관련 정보는 정상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 EU 설문조사 실시 Survey on EU

Yonsei-SERI EU Centre will conduct a public opinion survey in order to gather information on Korean opinion leaders' level of understanding on the EU. This survey will be the same as the one that was conducted last year. Online surveys will be available for the members of Yonsei-SERI EU Centre and SERI website and questionnaires will also be sent out to the members via email from the end of February . The survey is divided into three major sections: the first section asks about opinion leaders' level of understanding on the EU and includes questions such as "are you aware that the EU is composed of 27 member countries?" and "are you aware that there are member countries in the EU that do not use the euro as its currency?" The second section ask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U and Korea and the last part of the survey concentrates on current issues related to the EU.

연세-SERI EU센터가 EU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EU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EU센터 홈페이지와 삼성경제연구소 홈페이지, 회원들의 이메일을 통해 2월 말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문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EU 회원국, 유로화 사용 여부, 리스본 조약 등 EU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보는 항목과 한국과 EU의 관계에 대한 항목 그리고 최근 이슈와 관련된 항목 등이 포함된다.